

-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 선언 기자회견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의정부시장 김원기입니다.

오늘 저는 의정부시가 처한 재정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취임 이후 시의 재정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재정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의 재정구조로 계속 갈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지금의 재정구조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의 재정 상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입은 부족한데 빚은 늘고,
비상재원은 사실상 소진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한 사업까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의 재정구조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의정부시의 자체 세입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2010년 5,538억 원이었던 의정부시 전체 예산은
2026년 현재 1조 7천억 원 수준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자체수입은 같은 기간
2,700억 원에서 3,100억 원으로
1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세입 기반에는
의정부가 오랫동안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의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기반을 형성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기업과 산업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면서
지역에서 창출되는 세수 기반 역시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시의 1인당 지방세는 51만 5천 원으로
전국 시·군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문제는 자체수입의 증가 폭은 제한적인 반면,
시가 부담해야 할 지출은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복지와 교통 등을 중심으로
국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도
함께 늘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전체 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6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도
전국에서 의정부시가 유일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의정부시가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보조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와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
복지와 교통 등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확대됐고,
그 과정에서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도
함께 증가한 영향이 큼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2025년 의정부시의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12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하는 시비는
184억 원 증가했습니다.

자체수입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출이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체수입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수요를 보완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지방교부세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은
인구에 비해 면적은 작지만
실제 행정수요가 큰 수도권 도시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입니다.

의정부가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의정부는 면적은 작지만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서
감당해야 할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시의 주민 1인당 지방교부세는
약 35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비수도권 도시들은
1인당 100만 원을 넘습니다.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의정부로서는
이를 보완해야 할 지방교부세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규모도
크게 줄었습니다.
2022년 3,894억 원에서
2023년 2,929억 원으로,
한 해 사이 96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결국 자체수입 증가에는 한계가 있고,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지출은 늘어나는데,
이를 보완해야 할 재원마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지방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이 활용됐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지방채는
약 1,100억 원입니다.

부족한 일반회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에서 빌려와
아직 상환하지 못한 차입금도
482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시의 비상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불과 10억 원만 남아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은
당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

다.
오늘 이 자리는 전임 시장을 비판하거나
과거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어느 시장이든 그 시기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재정의 어려움을 특정 개인이나
특정 시기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해법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해결책’입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재정수요에 대비해
지금의 재정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정투입이 본격화됩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GTX-C 건설분담금,
경전철 대수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등
반드시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업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법정·의무경비와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시의 재정추계 결과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현재의 세입·세출 구조가 그대로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557억 원,
2028년에는 1,325억 원,
2029년에는 1,095억 원,
2030년에는 1,104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년간 부족한 자원만 총 4,081억 원입니다.

별도의 재정구조 개선이 없다면
그만큼의 추가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예정된 대규모 사업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지출만으로도
재정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야 합니다.
부족할 때마다 지방채와 기금으로
재원을 메우는 방식으로
더 이상 의정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의정부시의 재정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 의정부의 재정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형 재정혁신’은
세 가지를 함께 바꾸는 것입니다.

첫째, 지출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습니다.

둘째, 자체 세입 기반을 키우겠습니다.
기업과 산업을 키우고,
의정부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겠습니다.

셋째, 자원배분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의정부의 실제 행정수요와 재정여건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출을 효율화하고,
자체 세입 기반을 키우고,
불합리한 자원 배분 구조까지 개선하는 것.
이것이 ‘의정부형 재정혁신’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행정 내부에서만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시민참여 재정혁신TF’를 출범했습니다.

행정이 스스로 추진해 온 사업을
행정의 시각으로만 평가해서는
진정한 원점 재검토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전문가의 기준으로 따져볼 것입니다.
의회의 책임 있는 시각도 함께 담겠습니다.

TF에는 청년·복지·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지방재정·지방세·예산회계 분야 전문가,
여야 시의원이 함께 참여합니다.

TF는 재정혁신 선언을
실질적 변화로 구현하는 첫 번째 실행기구입니다.

‘시민참여 재정혁신TF’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며,
의정부시 재정의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건, 산하기관 운영비,
행사·축제, 민간위탁, 민간단체 보조금 등
주요 지출 분야를 하나하나 점검하겠습니다.

계속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투입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없는지,
지금의 재정여건에서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사업인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산하기관 운영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는 적정한지,
조직과 인력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지는 않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 안전망,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지키겠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쓰고,
조정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정혁신은
지출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지출구조를 바로잡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의정부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세입 기반을 키우는 일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기업투자 유치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반환공여구역을
단순한 개발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정부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시의 세입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정부의 자체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기업과 산업을 키우는 데 힘쓰겠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복지와 교통 등 보조사업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방정부마다 재정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지방비 부담이 계속 증가한다면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역시
의정부와 같은 도시의 실제 행정수요와 특수성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와 경기도에도
세 가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을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국가와 경기도의 정책에 따른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분담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실제 재정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원분담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의 실제 행정수요와 도시의 특수성을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해 주십시오.

의정부는 면적은 작지만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서
교통과 복지 등 감당해야 할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완한다는
지방교부세 본래의 취지가
현실에서도 충분히 작동해야 합니다.

셋째, 반환공여지에 대한
확실한 재정적·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십시오.

의정부는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도시의 핵심 공간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제 반환공여지가
기업과 산업,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장 기반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경기도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과 지원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처럼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는

유사한 재정여건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과도 힘을 모아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만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시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외부의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재정구조를 바로잡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민선9기 의정부시는 재정혁신TF와 함께
민생경제TF와 교통혁신TF를 가동했습니다.

재정구조를 바로잡아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시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시민의 삶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재정혁신을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재정혁신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다시 살펴봐야 하고,
한정된 자원 안에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까지 계속 늘리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우선 사용하고,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는
지켜내야 합니다.

시민참여 재정혁신TF를 통해
2027년도 본예산부터
재정혁신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재정 정상화 계획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혁신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조정되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아쉽거나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택이
의정부의 미래를 위한 것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공감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현재의 재정 상황을 숨김없이 말씀드리고,
어떤 사업을 왜 조정하는지,
그 과정과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의정부시 재정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